

<참 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동의연월일 : 2006. 3. 9.

동 의 자 : 이은길 의원 외 13인

1. 주문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과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기술력 차이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비투자마저 부진한 실정임. 이에 국가경쟁력을 살리고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정책에 의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는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규제를 즉각 폐지할 것
2. 중첩된 규제와 국가안보차원에서 희생되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발전대책을 강구할 것
3.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대적인 택지개발을 허용하듯 자립력과 일자리를 제공할 최소한의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할 것

2. 제안이유

국내 첨단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함에도 각종 경제 활동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에 입지조차 못할 경우 아예 투자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임.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필요성은 중앙부처도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허용시기를 연기하고 있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0~30년간 먹고 살길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수도권내 첨단대기업 신·증설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임.

경기 동북부지역은 전국과 비교해 볼 때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임에도 과밀억제를 목표로 하는 수정법에 의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모순임.

접경지역은 향후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활용가치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정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은 팔당 수질보전이 주 목적임에도 수계와 관련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생활수준이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임.

자연보전권역이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수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권역조정이 필요함.

과밀억제권역의 도시 중 과천시, 하남시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공업지역이 전혀 없고 고양시는 0.03%, 의정부시는 0.42%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 삼송신도시의 경우 14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공업지역 지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자립력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 이은길

찬성자 임봉규 차희상 장정은 김기수 김현욱 정재영 강석오 정홍자 임정복  
조봉희 김수철 김대원 신보영